

국민연금
의료보장

사회보장제도 확대된다

흔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는 “빈곤을 구제하고 개인을 포함한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모든 사업”으로 내려진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은 고도의 산업화사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역할의 중요성은 커지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는 실로 암담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채 현실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복지사회의 도래는 과연 어떤 방향에서 이뤄져야하는지 2천년대의 복지정책의 주요문제를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방향

2천년대에 이르면 의료보장제도의 확립 및 연금제도의 확대 등 소득보장정책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의 증가와 함께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민들의 욕구도 커짐에 따라 복지서비스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공적부문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개개인의 복지에 부합될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차츰 확립돼야한다.

또 핵가족화 현상이 지금보다 더욱 뚜렷해져 지역사회에서의 상호부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그즈음엔 고령자에게 적당한 일거리 개발과 이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한 부분연금, 부분고용등의 정책이 마련돼야한다.

비단 고령자만이 아니다. 노동능력과 의지를 가진 신체장애인 및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자립심, 생의 보람, 사회전체의 활력유지에 있어서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한편, 정책간 조정과 유기적 연관성의 확보를 통해 재원의 유효활용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해 고도의 경제성장이 없어도 복지의 개선을 추진해 갈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업등 사회집단의 복지기능이 더욱 강조돼야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서비스대상자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해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해 시·군·도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대폭 설치하는 일도 고려해볼직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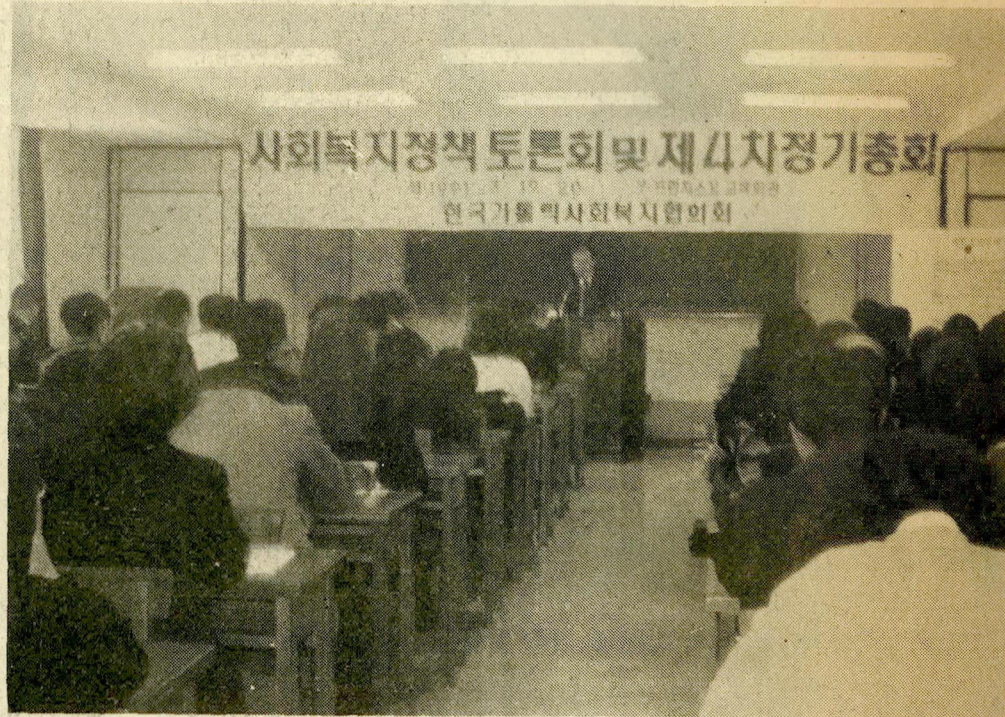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방안

△아동복지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며 아동복지

다. 이와함께 18세 이상의 성장고아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결혼시에는 1인당 50만원과



란 특수한 장애를 지닌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심신이 건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분야의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벌이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아동복지와 관련해 떠오르는 문제점은 빈곤가정에서의 아동양육과 교육문제, 여성의 사회진출확대로 인한 영유아보육문제, 산업·화재·공해·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장애문제, 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한 고아와 가출아동문제, 남녀교제의 확대와 성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미혼모와 기아문제등으로 요약될수 있다.

따라서 취학이전 아동을 돌봐주는 탁아방을 권장하는 한편, 그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탁아료의 현실화와 유자격보호의 확보, 급식비 보조, 조기교육의 실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보다 힘써야 한다.

불우아동의 발생예방과 선도를 위한 아동상담소를 확대하고 극빈모자가구와 영세민등 생계의 어려움으로 자녀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대해 생계비와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는 단순한 수용보호가 아니라 집단보호지도를 통해 아동들의 문제점들을 교정해주는 한편, 이들의 인간적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들의 경우는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사회인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각 시도의 후원금 활성화 노력이 뒷받침돼야한다.

△부녀복지

근대화과정에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가정과 여성의 역할변화, 생활주거양식의 변화, 취업여성의 증가, 전쟁및 산업재해로 인한 가정의 사망 등에서 파생돼온 부녀복지문제는 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등 이른바 ‘요보호여성’의 생활보장에 그 초점이 두어진다.

모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0년 의원입법으로 모자복지법이 제정, 남편이 없는 모자가정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및 주택분양우선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윤락여성선도사업은 부녀직업선도시선으로 주시금 지원교육을 실시

사회정착금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요보호여성뿐 아니라 여성전체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미 제정된 친족상속법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확대실시가 요구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노인복지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들 2천년대에는 자녀들에 의해 노후생활이 보장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대비, 노인들은 △당사자 스스로가 젊었을때 노후를 위한 경제력을 마련 △공적연금이나 공적부조에 의존 △가족이 천라하는 한 스스로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방법등을 강구해야한다.

산업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정책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인데, 이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이다.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소득보장의 장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발전의 역사가 짧은 탓에 이 제도에 의해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1.0%~1.2% 수준에 불과하다.

◇2천년대 사회복지의 의료보장제도의 확립 및 연금제도의 확대등으로 소득보장책이 상당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초 열린 한국가톨릭사회복지협의회 주최의 사회복지정책토론회 장면.

이를 보완하기위해 89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령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자 7만1천명에 대해 월 1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고령자 취업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노인문제연구소가 지난해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노인의 56.0%, 70대 노인의 32.0%가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연금수급의 유무와 그 수준 △자녀교육비 부담의 유무와 그 수준 △취업이외의 수입유무와 그 수준 △부양가족의 유무등으로서 경제적인 요인과 많은 연관이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취업의욕을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1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에 노력할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등의 노력의무의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런 법규정에 의해 정부는 대한노인회가 운영하는 노인능력은 행 1백개소에 월 30만원씩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경우 작업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기는 하나 사회의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쓸모없는 퇴물”정도로 밖에 비춰지지않아 노인들의 취업의욕은 여전히 해결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진심으로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정책을 전개할 의사가 있다면 고령자취업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즉, 이 법에서는 △노인직종을 규정하고 △국가나 기업체는 종

업원을 고용할때 일정비율이상 60세 이상 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노인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혜택 또는 장기저리융자등의 특혜조치를 할 것 △노인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인의 여가생활을 질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1만7천개에 이르는 경로당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시설은 노후하거나 장소가 협소, 내부시설 빈약, 운영비 부족, 프로그램의 빈곤 등의 문제에 부딪쳐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장소이기 위해서는 시설내에 휴게실 외에 간단한 운동장구의 비치, 도서실 설치, 간이주방 시설, 건강체조나 레크레이션을 위한 다목적 강당도 설치돼야할 것이다.

노인학교 역시 경로당만큼이나 많지만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노인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비롯해 노인학교 교과목 설정에 따른 노인교과서 편찬, 노인학교 운영자및 교사에 대한 자격규정이 동시에 마련돼야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사업은 들어가는 교통사고, 산재, 공해등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발생율도 높아질 것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장애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는 가정의 보호의무를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의 지원및 이해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져야한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현황을 보면 4백만 장애인중 0.3%에 해당하는 1만1천7백62명만이 1백20개 수용시설에 수용됐을 뿐이며 자립작업장도 고작 86개, 의료시설은 1백20개 복지시설중 재활치료시설을 갖춘 곳은 5곳 등으로 형편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을 꾀할 정책마련이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고 볼수 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위한 국공립병원 보건소및 기타 의료기관의 무료재활치료가 요구되고 있으며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 보장구의 무료교부사업도 아울러 실시돼야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 빠뜨릴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직업재활사업으로 적절한 직종개발과 취업보장대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할 것이다.

<이숙진 기자>

시·군단위 사회복지사무소 설립돼야 극빈모자가구·영세민 생계지원 절실 빈곤가정 아동교육위한 탁아소 시급